

#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9월 4일 박동학 의원 외 23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9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년 9월 5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건설교통위원회 박동학 의원)

## 3. 주 문

- 정부는 1982년부터 수도권 규제를 통한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정책을 실시하면서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그 실효성이 미미하여 오히려 국가경쟁력만 저하시켜 왔다는 자성이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음.
-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할 수 없는 기업의 상당수가 지방이 아닌 외국으로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 글로벌한 기업과 기술 및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 증대, 지방과 상생발전으로 이어지는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수도권 규제는 결코 제로섬 게임조차 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임.

- 따라서 부천시와 경기도의 요구가 반영된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여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국민경제가 모두 성장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윈-윈 전략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밝히고자 함.

붙임 : 결의문 1부.

#### 4.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 5.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제305호
결의 년월일	2008. 9. 10 (제146회)

발의년월일 : 2008. 9. 4.

발 의 자 : 박동학 의원 등  
24인

## 1. 주 문

- 과도한 수도권 규제의 철폐를 촉구하며 별지와 같이 결의안을 채택한다.

## 2. 제안이유

- 정부는 1982년부터 수도권 규제를 통한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정책을 실시하면서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그 실효성이 미미하여 오히려 국가경쟁력만 저하시켜 왔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음.
-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할 수 없는 기업의 상당수가 지방이 아닌 외국으로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 글로벌한 기업과 기술 및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 증대, 지방과 상생발전으로 이어지는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수도권 규제는 결코 제로섬 게임조차 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임.
- 따라서, 부천시와 경기도의 요구가 반영된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여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국민경제가 모두 성장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윈-윈 전략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밝히고자 함.

붙임 : 결의문 1부.

##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결의문

우리는 지금 국경없는 경제로 대변되는 무한경쟁의 세기사적 흐름 안에서 수도권 성장의 제한하는 규제정책이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경제적,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국가발전을 위해 올바른 정책인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1982년부터 수도권 규제를 통한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정책을 실시하면서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그 실효성이 미미하여 오히려 국가경쟁력만 저하시켜 왔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수도권 규제정책이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국가 경쟁력만 약화시켰다는 반성 아래 규제를 대폭 철폐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도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수도권의 기업을 지방에 이전시키는 것을 균형발전이라고 하지만 수도권 규제로 인하여 수도권에 입주할 수 없는 기업의 상당수가 지방이 아닌 외국으로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 글로벌한 기업과 기술 및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국민 소득 증대, 지방과 상생발전으로 이어지는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수도권 규제는 결코 제로섬 게임조차 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정부는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개발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을 살린 특화된 지역발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간 발전적 분업구조 형성과 상호 협력이 함께 상생하는 길임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천시와 경기도의 요구가 반영된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여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국민경제가 모두 성장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윈-윈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87만 부천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는 수도권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철폐를 간곡히 촉구하는 결의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는 단순히 부천시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부천시의회 의원 30명과 87만 부천시민의 충정임을 밝힌다.

1. 수도권지역 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자유로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하라.
1. 지역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김포공항 주변의 과도한 고도제한을 재조정하라.
1.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도심지내 군부대를 조속히 이전하라.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를 탄력적으로 해제하라.

2008년 9월 일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

# 지역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부천시의 요구사항

도심지 내 군부대, 공항주변 고도제한, 그린벨트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와 일자리 창출 및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기업규제의 조속한 철폐

## □ 수도권지역 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입지 규제 완화

- 과밀억제권역 내 대기업 입지 허용(완화)
  - 공업지역 내 공장증설 허용 범위(3,000m<sup>2</sup>이내) 확대
- 투자를 위축시키는 공장총량제 즉각 폐지
  - 시장경제에 맞는 융통성있는 투자여건 조성

## □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재검토

- 오정구, 원미구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고도지구의 재지정
  - 과도한 고도제한지구의 재조정 및 고도제한 높이의 재검토
- 고강지구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의 활성화
  - 고강지구 뉴타운 사업을 저해하는 고도제한(57.86m이하)의 조속 완화

## □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도심지내 군부대 조속 이전

- 오정구 오정동 소재 군부대 조속 이전으로 지역 발전 도모

## □ 그린벨트의 탄력적 관리로 경제 활성화

- 대장동 일원 그린벨트 해제 (4백만m<sup>2</sup>)
  - 하이테크산업단지 및 대규모물류유통센터 등 조성 허용
- 대학 증원 총량규제 폐지 및 그린벨트 내 대학 증축 허용